



팔레스타인
2~3면
이란 전쟁
파병 반대 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반란의 프랑스,
잠잠한 영국?
5면

긴장이 쌓이는
남북 관계
6면

난민 대학생
인터뷰
13면

직무급제 7면
초광역특구법
=노동개악 14면

미국
AI 거품
15면

이주민 지원
예산 삭감하는
추미애
16면

프랑스 반란
8~13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인종청소 중단하라

관련 기사 2~4면

이재명 정부의 파병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다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대규모 추방 밀어붙이며 서안지구 공격 확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전역을 봉쇄하고 주요 도시 헤브론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주택과 상점, 도로를 파괴하고 있다.

10월 26일까지 헤브론에서 3,100명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집을 떠나야 했다.

이스라엘군은 10월 23일 헤브론 인근 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인 두 명이 이스라엘 군인 두 명을 사살한 사건을 구실로 공격을 시작했다.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서안지구 전역에 대한 봉쇄와 대규모 군사작전을 명령했다.

헤브론의 여러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은 주민들에게 퇴거를 명령했다. 일부 주민들에게는 소지품을 챙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군인들은 비워진 주택을 점거해 군사 거점과 감시 초소로 사용한다. 그리고 불도저로 주택과 상점, 도로를 파괴했다.

쫓겨난 팔레스타인인들은 군사작전이 끝날 때까지 돌아올 수 없다고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밝혔다.

헤브론 시장은 도시가 재난 지역이 됐다고 호소했다. 이스라엘군이 주요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주민들은 출퇴근과 등교가 불가능해졌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어려워졌다.

서안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군의 수색과 체포, 검문소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인 정착자들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검문소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몇 시간씩 발이 묶이고, 이제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전한다.

이스라엘군과 정착자들은 이전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을 짓밟아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북부 제닌과 툴카름 등의 난민촌을 공격해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이주시켰다. 상당수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헤브론 주민들도 같은 처지에 놓일 위험이 크다.

시온주의 국가의 본모습

헤브론 공격은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자행됐다.

네타냐후는 군사 작전을 확대해서 강경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다. 서



10월 24일, 이스라엘군은 헤브론을 비롯해 서안의 여러 국경 검문소들을 폐쇄했다

안지구를 이스라엘에 완전히 병합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네타냐후와 극우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식으로 건설됐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고향에서 쫓겨났다. 1967년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확대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빼앗아 왔다. 이스라엘 국경 안에 남은 팔레스타인인들도 토지를 빼앗기고 차별받아 왔다.

가자지구에서는 장기간의 봉쇄와 학살로 삶의 기반이 파괴됐다. 최근에는 식량 부족이 다시 심각해져 기근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브론에서 벌어지는 일은 시온주의 국가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수십 년 동안 자행해 온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이를 뒷받침해 왔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무기와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을 비호해 왔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중동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경쟁 세력을 압박하는 데 핵심적인 동맹이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준비하며 중동의 긴장

을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공격 확대도 이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앞선 전쟁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고도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란은 세계 석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줬다. 안사르 알라(예멘의 '후티')의 공격도 홍해 해상 운송을 위협해 왔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 이란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지만, 전쟁을 확대할수록 중동의 에너지 공급과 해상 수송로가 다시 타격받을 위험도 커진다.

이스라엘도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다. 전쟁과 효과적인 점령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적 우위에 불구하고 중동을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지배 질서에 맞선 저항이 분출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번지는 저항

프랑스에서 시작된 학생·노동자들의 반란이 유럽과 세계 곳곳의 저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위대는 자국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면서 팔레스타인 깃발도 흔들고 있다. 시위대는 “우리는 모두 가자의 아이들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브라질 대선에서는 이스라엘을 강

력하게 지지해 온 보우소나루 진영이 패배했다. 세르비아에서도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온 집권 세력이 학생 주도 운동에 패배했다. 학생 운동 측은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력 중단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특히 10월 30일에는 국제 항만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공동 행동과 파업에 나선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튀르키예, 모로코 등 여러 나라의 항만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와 군사 장비의 운송을 거부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의 학살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 공급망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는 노동자들이 운송을 거부하면 이스라엘과 그 후원국들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연대로 급진화한 세계 노동자·대중의 저항은 그들에 맞설 힘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고 있다.

10월 31일(토)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헤브론 주민 강제 퇴거와 서안지구 봉쇄, 가자 학살에 반대하고 국제 항만 노동자들의 행동과 연대하는 집회를 연다. 이 집회를 통해 국제적 저항이 주는 영감을 한국에도 가져와야 한다.

박이량

10월 30일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 파업

세계 100여 곳의 항만 노동자들,
“우리는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김준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재개 준비, 팔레스타인인 인종청소 강화로 중동에 전운이 다시 짙어지는 지금,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반전(反戰) 공동 파업에 나선다.

10월 30일 ‘항만 노동자 국제 행동의 날’은 지난해 남유럽의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을 직접 계승한다. 당시 선두에 섰던 이탈리아 기층노동조합(USB), 그리스 피레우스항만공사 항만노동자노조(ENEDEP)가 모로코 민주노동자동맹(ODT),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항만노조 등과 함께 이번 행동을 발의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일터를 마비시켜 전쟁과 학살과 군국주의에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단연 핵심 슬로건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 지지다. 이에 더해 이란 전쟁 즉각 종식, 자국의 재무장·군사주의 반대, 미국·유럽연합·나토가 항만을 군사 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등을 내걸었다.

지중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40퍼센트를 멈출 계획이다

이날 파업은 전쟁뿐 아니라 전쟁이 심화시키는 빈곤과 노동계급 공격에도 항의한다.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노동조건 후퇴에 반대하며, “일 자리를 없애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신기술 도입, 기계화·자동화, 인공

지능 도입에 반대”한다.

파업의 주력 부대는 지중해 항만 노동자들이다. 프랑스 남서부에서 튀르키예까지 약 1,100해리(1,8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항로의 항만들이 파업하는데, 이 파업으로만 지중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퍼센트가 마비돼 20억 달러어치의 물류가 멈출 것이다. USB는 운송 단순 지연 손실만 4,2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항만 파업은 유럽을 넘어선다. 인도와 멕시코의 해운노조와,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해 파업한 역사가 있는 미국 서부항만노조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지부(ILWU Local 10) 등도 파업 동참을 결의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10월 30일 파업이 항만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USB의 제안에 따라 여러 기층 노조들이 그날 파업을 벌이기로 했고, 그리스에서는 전국철도노조 등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10월 30일의 파업과 행동은 지금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저항에 순풍이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연대의 기치는 청년 반란과 노동자 행동 모두를 추동하는 공통 분모다.

11월 5일에는 프랑스의 7대 노동조합 연맹들이, 11월 11일에는 스페인 노총이, 11월 20일에는 이탈리아 노총 GCIL이 하루 총 파업을 선포한 상태다. 이 파업 일정들은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청년 반란과 거리를 두고 잡은 것이지만, 10월 30일 국제 공동 파업은 노동자들의 행동과 청년 저항을 만나게 하고 11월의 파업들에 열기를 불어넣는 징검다리다 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은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저항에도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연대 집회가 열린다

그리스 피레우스항만공사 항만노동자노조(ENEDEP)는 이렇게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구호는 그저 평화 염원이 아니라 투쟁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다.

“우리는 공통의 이익과 공통의 불만이 있으며, 공통의 적에 맞선다. 착취와 이윤을 생명보다 우선하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떠넘기는 소수와 그들의 정책에 맞서는 것이다.

“불굴의 팔레스타인 저항에서 영감을 얻어 반전 운동을 강화하고, 파업과 점거와 시위로 트럼프와 네타냐후와 그들이 섬기는 체제에 함께

맞서자. 우리에게 힘은 있다.”

각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이 파업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 BDS 운동과 팔레스타인 현지 단체들이 파업 연대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영국 전쟁저지연합과 미국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은 10월 30일 집중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강제 이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10월 31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으로 모이자.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이재명 정부의 위기와 극우의 공세 — 좌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일시 10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 한국열린평생교육원 5층 강의실 (부평역 1번 출구 앞 5미터)

발제 김문성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인천 지역 모임 문의 010-6224-2157 / incheon@ws.or.kr

초청 강연 —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에게서 듣는다

핵발전과 SMR, 그리고 핵융합: 핵에너지 제대로 알기 ② 핵발전과 에너지의 미래

일시 11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이재명 정부, 이란전쟁 참전 착착 진행 중

김중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재공격을 준비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전쟁에 군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10월 21일 <뉴욕 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국 중간선거 뒤 이란을 다시 공격할 구체적 계획을 세웠고,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최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만나 새로운 공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한 미군 전력의 배치를 11월 초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재명의 국방특보 김병주는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이 최소한 11월 중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초 한국 국방부 조사단은 아랍에미리트(UAE) 알다프라 미 공군기지에서 P-8A 초계기 운용 여건을 확인했다. 9월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외교부 장관 조현이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같은 달 미국 주도 ‘해양자유연합(MFC)’과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에 현지 상황 정보를 공유받을 연락장교를 각각 파견했다(10월 23일 <동아일보> 보도).

지난 5월 당시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헤그세스에게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 자산 지원이라는 4단계 기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지 표명에 이어 연락장교 파견으로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까지 이뤄졌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군 자산 지원만 남은 것이다.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전쟁 개입 10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이란 전쟁 파병 반대 집회

10월 2일에는 청해부대 49진이 출항했다.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면 확대된 임무를 처음 수행하게 될 부대다. (물론 동의안 통과 전이라도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했듯, 현행 동의안의 “지시되는 해역” 문구를 근거로 국회 동의 없이 오만만에 먼저 투입될 수도 있다.) 앞서 5월에 출항한 청해부대 48진도 이란 전쟁에서 자주 쓰이는 자폭 드론 등에 대한 방어 능력을 크게 보강해 호르무즈 투입에 대비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입구인 오만만까지 넓히고 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군대를 먼저 보내 놓고 작전 구역을 넓히는 식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미국의 이란 전쟁을 돕기 위한 파병이 착착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1월 중에 제출될 파병 동의안은 그 귀결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정부를 위기에 빠뜨릴 부결을 택할 리 없다.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이재명의 말은 완전한 사기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거론했다.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오만만까지만 작전 구역을 넓히는 것이므로 전쟁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입구인 오만만은 이미 미군의 핵심적인 대이란 봉쇄 작전 현장이자 실제 교전이 벌어지는 전장이다. 미군은 10월 6일과 10일에도 오만만에서 자국 함정을 감시했다는 이유로 이란 연계 선박을 격침하고, 봉쇄선을 넘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물선을 타격했다.

이런 곳으로 4,400톤급 “전투함 파병부대”(국방부)를 보내는 것은 미국의 이란 봉쇄와 압박에 가담하는 것이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추가될 초계기도 문제다. 정부는 ‘비전투 자산’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미군 봉쇄 작전의 핵심인 감시 임무를 지원하는 전투 자산이다. 이번 전쟁 중 미군이 유럽에 있던 초계기를 중동으로 옮기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 초계기가 한 대라도 오만만을 맡으면 그만큼 미군의 감시 부담을 덜어 준다.

정부가 초계기 거점 기지를, 애초 국방부 조사단을 보냈던 UAE가 아니라 아직 이란의 공습을 받은 적 없는 지부티의 미군 기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시사적이다(10월 19일 <경향신문> 보도). 정

부 스스로 이번 파병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부를 전쟁 개입임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와 초계기 추가 파견은 명백한 참전이다. 미국의 침략 전쟁에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정부의 참전 준비가 실질적이라는 점은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거듭 공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에서도 드러난다. 주한 이란 대사 아흐마드 에르파니안은 10월 2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긴장을 더욱 높이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파병 반대 운동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폭로할 게 아니라, 그 말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월 21일 ‘파병반대 긴급행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의 말을 “가짜”라고 할 게 아니라 “중요한 진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비중 있게 개진됐다.

하지만 기만술에 불과한 말을 운동이 ‘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부 지도자의 말과 행동의 괴리를 대중이 직시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동의안 제출을 앞둔 지금, 대중에게 ‘이번 파병은 곧 참전’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고 선명하게 던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들끓는 프랑스, 잠잠한 영국?

영불 해협 건너 프랑스에서 10월 17일과 24일에 벌어진 장엄한 대중적 분출과 유럽 곳곳의 여러 시위들을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왜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영국인들의 천성 탓일까? 시인 G. K. 체스터턴은 이와 관련해 냉소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심지어 1640~1650년대 영국 혁명 때도 “소수가 자유를 논하기는 했지만, 영국 전체는 에일 맥주를 논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냉소를 담아, 파리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사이먼 쿠퍼도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 프랑스 상황에 관해 이렇게 썼다. “프랑스에서 혁명적 행동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다. ‘진짜 혁명인가 아니면 그저 보여 주기용인가?’ 프랑스인들은 과거의 봉기를 숭상하고 재연하도록 교육 받는다.” 다시 말해, 어떤 국민은 봉기하고 다른 국민은 그러지 않는 데는 뿌리 깊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시기만 보더라도, 마거릿 대처 정부하의 1980년·1981년·1985년의 도심 빈민가 반란, 1984~1985년의 영웅적인 광원 파업, 1990년에 대처를 실각시킨 대중적 주민세 반대운동이 있었다.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출범한 2010년에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격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2011년에는 또 다른 도심 폭동과 두 차례의 공공부문 대중 파업이 벌어졌다.

개혁주의 약화

그럼에도 지난 15년은 수수께끼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영국 자본주의도 다른 유럽 주요 자본주의들과 마찬가지로 금융 위기의 여파로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지고, 권력층의 정치 시스템이 분열하고, 복지가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 왜 프랑스가 두드러지는 것일까? 프랑스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노란 조끼’ 운동이 분출하고, 2023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맞선 대파업이 벌어지고, 이제 또다시 대중 항쟁이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쌓이는 고통과 분노는 세계적 영국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대

영국에서는 불만이 인종차별로 나타나서 그렇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프랑스 상황의 역설 하나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이 내년 대선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36퍼센트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좌우 양쪽으로 극심한 사회·정치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로 연결된 두 요인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영국 노동당은 유럽의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만큼 쇠락하지는 않았다. 노동당 전 총리 키어 스타머는 집권 후 금융 시장 달래기에 목을 뺐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에 알량한 양보를 던져 줬다. 현 총리 앤디 버넘은 그런 줄타기를 더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제로는 거의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

영국 지배계급의 최대 자산 중 하나는, 노동당이 노동자 운동을 억누르는 노동조합 관료의 하중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관료층은 2011년 대파업을 배신했고, 2022~2023년 임금 인상 투쟁이 더 큰 도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대륙의 두 주요 국가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상황에서 중요한 측면은 조직된 개혁주의의 약화로 마크롱 같은 우

익 기회주의자나 파시스트 조르자 멜로니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것만이 아니다. 두 나라의 노동조합 운동이 여러 경쟁 노조 연맹으로 분열돼 있다는 측면도 중요하다. 여기서 생겨나는 틈새를 소규모 좌파 노동조합들이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부문간 기층 위원회’(SI Cobas)는 주로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을 주도해 왔다.

반면 영국에서는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분노가 정치적 쟁점을 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러싼 대중 운동들로 표현됐다. 이는 1980년대에 ‘반핵군축운동(CND)’의 부활로 시작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전쟁저지연합(StWC)의 운동으로 크게 발전했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대중적 급진화의 초점이다. 서방 지배계급의 인종학살 공모는 제국주의의 실상을 직시하게 해 준다.

여기서 다른 차이들은 주로 카를 마르크스가 정치적 상부구조라고 부른 수준, 즉 지배계급이 대중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들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고통, 슈퍼 부자와 그 하수인들에 대한 증오, 인종학살이 지피는 분노의 불길은 서로를 강화시키며 국경을 가로지른다. 이런 인화성 강한 요소들이 뒤섞인 상황은 영국에서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번역 김준호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이란 전쟁과 한국의 참전 문제
인공지능(AI) - 희망, 거품 혹은 재앙?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전통
팔레스타인인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7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긴장이 쌓이는 남북 관계

이재명 정부는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9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과 조선(북한)이 대치하는 DMZ 일대가 불안하고 위험한 곳임을 새삼 드러냈다.

지뢰 폭발 이후에도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와 한국군의 경고 사격, 지뢰 제거 작전이 맞물리며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10월 19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새로운 전술 부대의 배치,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대응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서해안 등지에서는 북한의 새 자주포 포대 등이 목격되고 있다.

그런데 김여정은 담화에서 DMZ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유엔사, 즉 미군을 겨냥하지는 않았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대미 관계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의 긴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제국주의 갈등이라는 더 큰 맥락을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도발했는가?” 같은 지역적인 물음을 앞세우기 쉽고, 자국 정부와 지배계급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도 어려워진다.

오늘날 한반도는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등 이른바 제1도련선을 따라 점증해 온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의 최전선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지배자들은 나름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는 긴장 고조에 일조하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깊숙이 얽혀 있다. 한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주니어 파트너이고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전진 기지로 만들고 있다.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해 그 나름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을 얻어 내려고 한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군대를 보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한국은 이란 전쟁에는 군대를 보내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고, 남북 대화의 필요를 거듭 밝혀 왔지만, 동시에 하위제국주의를 지향하며 군비 증강 속도를 높여 제국주의 체제 내에서 역할과 비중을



미중 갈등 속에 남북한 군비 경쟁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

늘리려 애쓰고 있다.

5월 이재명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N사업’을 공개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인 10월 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다.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대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경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 질서 안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 아시아 지역 강국(하위제국주의)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협조하고 있다. 비록 트럼프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외의 다른 한미(일)연합훈련은 거의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런 일들이 모두 북한 등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 김여정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만적,” “이중적,” “생색내기,” “개꿈”이라고 맹비난해 온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다 돼 가는 지금, 한국과 북한은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북한도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증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을 잇달아 공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과 드론 등의 무기 체계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 군대의 이 드론 혁신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지뢰 폭발 이후

이처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긴장 고조는 제국주의 갈등과 남북의 군비 경쟁을 배경으로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DMZ라는 특수한 조건이 또 다른 위험 변수가 됐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2024년부터 남부 국경 요새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한 정부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할 것을 염려해 국경 방비를 강화하는 듯하다. 특히 러시아 파병과 무기 수출로 북한군 전력에 일부 공백이 생긴 지금이 북한 정부에게는 안보가 취약한 상황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한국이 북한의 요새화에 대응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9월 DMZ 지뢰 폭발도 유엔사가 한국군에 북한의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뢰 폭발 사고가 나기 전 한 달 동안 한국군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북한군을 향해 “20회 이상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단호히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었다(《문화일보》 9월 9일 자). 북한 군인들이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하던 중에 MDL을 넘어서 한 ‘방어’적 조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 군사분계선(MDL)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르고 그 때문에 합의된 분계선도 없다. 북한군, 한국군, 심지어 유엔사가 MDL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그런 모호한 선을 놓고 아슬아슬한 대북 군사 행위를 벌여 온 것이다.

적대 관계가 구조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뢰 폭발 이후 국힘 등 우파들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도 거기에 부응하며 DMZ에서 더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함께 북한군의 MDL 침범을 공동조사하고 MDL 남쪽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여정이 밝힌 바로는, 한국군은 10월 1일~17일에 경고 사격을 91차례나 벌였다. 그럼에도 한국 우파들은 경고 방송이나 경고 사격이 “북한군의 MDL 침범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조선일보》 10월 21일 자).

당장 남북 간에 큰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남북이 인식하는 경계선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강경 대응이 지속되면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위험이 커진다.

과거 남북한 군대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수차례 국지적으로 충돌해 서해를 “피와 죽음”의 바다로 만든 적이 있다. NLL은 남북의 합법적 군사분계선이 아니었음에도 남북 양측은 서로 월선(월경)해가며 충돌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충돌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장군이 아니라 사병들이고, 접경지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적대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영익

이재명 정부의 직무급제 추진

‘동일임금’ 탈을 쓴 차별 고착화·임금 억제책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직무급제를 추진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 아래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를 요구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문화된 것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37년이 지났어도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커 OECD 국가들 중 최악이다. 이는 ‘동일임금’ 조항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 준다. 이런 경험은 근로기준법에 같은 문구를 넣어도 그것만으로는 차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임금 차별을 없애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여성·청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 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일은 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이 정부 들어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메가프로젝트를 명분으로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최근 민주당은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파견근로 허용 특례 등을 포함하는 ‘메가특구법’을 발의했다.

또 주목할 것은, 정부가 ‘동일임금’ 법제화의 전제조건으로 직무급제를 추진하려 한다는 점이다. 동일임금을 주려면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성별·고용형태·나이 등과 관계없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일견 공정한 것처럼 들린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차별 해소”, “공정”, “동일임금”이라는 미명 하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려 했다. 우파 정부 뿐 아니라, 중도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 정부에는 직무급제에 진보적 색깔을 입혀 홍보해 줄 진보계 인사들이 있었



직무급제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직무급제는 “평생 저임금 제도”

고, 그만큼 노조의 수용을 압박할 수단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노조 지도자들을 노정 협의나 공공기관 운영 참여 등에 끌어들이는 방안은 또 다른 당근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 상층 간부 일부는 직무급제를 임금 차별의 대안으로 검토하며 정부와의 협상 대상으로 여겨 왔다. 특히, 산업 또는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사회적 직무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정년연장 TF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가해 왔고, 지난해 이 TF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을 대가로 “업종별 직무급제”를 노사자율로 도입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보적 포장을 벗기고 보면, 직무급제 추진의 본질은 한국 임금체계의 근간인 호봉제(연공급제)를 허물어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오랫동안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호봉제(연공급제)는 산업화 초기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았던 시절에는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임금체계였다. 당장은 임금을 적게 주면서도 미래 보장과 승진을 미끼로 노동자들의 충성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데다 정년 연장마저 되면 사용자들의 임금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억제하고자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이나 비정규직, 청년 노

동자들에게는 이로운가? 그렇지 않다. 이미 직무급제가 도입된 곳들의 경험을 보면, 오히려 직무급제가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구실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직무급제가 정착된 서유럽과 미국에서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은 지난 수십 년간 더 심화됐다.

한국의 금융기관 등에서 주로 여성 직원들에게 적용된 분리직군제,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된 직무급제를 봐도, 그것의 목적과 효과가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직무급제 하에서는 주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리, 돌봄, 사무보조 등의 직무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상위 직무 등급에 오르기도 힘들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일해도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

성차별적 인식이 개입된 탓에, 낮게 평가된 직무에 여성들이 많다. 이는 직무급제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일 대안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적용된 직무급제도 사실상 정규직 임금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낮은 임금에 묶어두는 구실을 했다. 이런 제도를 직무 가치에 걸맞는 “공정한 임금”이라고 정당화하기까지 하니, 당사자 노동자들은 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직무 평가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대안이 제시돼 왔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직무에 등급을 매기고 임금 차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직무 평가 자체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과 분열을 부추겨 사용자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단결력과 임금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사용자 측의 각개격파를 통한 임금 억제에 “노조 동의”라는 명분만 제공해 줄 위험이 있다.

임금 평등의 진정한 동력

임금 차별 해소에 노동조합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그 방향과 방식이다. 노조 상층 간부들이 정부, 사용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임금체계 개편을 협의한다 해서 임금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격차 해소의 진정한 동력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이간·분열시키려고 일부 노동자를 차별하는 사용자들에 맞서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노동자들이 그것을 기준 삼아 싸우기에도 유리하다(상향평준화). 또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임금 격차 좁히기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가능했다.

노조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 보지도 않고, 하나를 얻었다고 다른 하나를 양보하며 노동조건 후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가령, 정년 연장을 얻는 대가로 (임금 수준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직무급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파 정부가 추진한 노동 개악을 노동자들이 맞서 싸워 저지해 놓으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해 똑같은 개악에 진보적 색깔을 칠해 야금야금 밀어붙이는 문제가 반복되도록 해선 안 된다.

최미진

이 글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임금, 임금격차, 연대》(2026년 개정증보판)의 큰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웹사이트에서 소책자 전문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저항의 배경, 전개, 전망

이 글은 10월 22일(목)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이 주최한 같은 제목의 토론회에서 드니 고다르가 한 발제와 청중 발언·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고다르의 토론 정리를 글로 옮긴 것이다.

드니 고다르는 프랑스 인종차별 반대 연대체 ‘연대의 행진’의 조직자이자 프랑스 혁명적 좌파 단체 ‘계급 독립성’의 지도적 회원이다.

지금 프랑스 상황이 주는 영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제들에 관해서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론적 문제들이 구체적인 현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제기되는 여러

프랑스의 민중 항쟁 상황

지난 토요일인 10월 17일, 프랑스 전역의 도시들에서 벌어진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은 민중 항쟁이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다들, 그리고 언론도 폭력, 약탈, 소요, 바리케이드만 집중 조명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날의 주된 측면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했지만,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대로 계획된 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적어도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어쩌면 200만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계급 전체가 들고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교외의 서민 동네에 사는 연령대와 인종을 불문한 사람들이 가족·친구들과 함께 도심 거리에 나와 시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급의 온갖 다양한 행동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소요도 있었고, 바리케이드도 있었고, 관공서 건물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계급이 얼마나 단호하고 분노에 차 있는지 보여 주는 일이었지

요. 약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 하나를 보여 줍니다. 바로 빈곤입니다. 임금이 깎이고, 연금과 각종 복지 수당이 공격받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지요.

하지만 주된 모습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거리를 점거하고 춤추고, 구호를 외치고, 토론하고, 걸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동부의 독일 접경지에 있는 도시 스트라스부르의 사례입니다.

토요일 이른 오후 약 2만 2,000명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곳 동지들에 따르면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위 시작 불과 한 시간 만에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시위하던 사람들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져 밤까지 도시 전체를 점거했습니다.

우리 계급의 수많은 사람들이 항쟁에 나서서 거리를 차지한 것, 이것이 프랑스에서 10월 17일이 갖는 핵심 의미입니다.



폭동과 약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항쟁에 나선 것이 프랑스 투쟁의 핵심 의미다

프랑스 상황은 세계적 추세的一部分

프랑스 상황이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추세의 한 단면이라는 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양극화입니다. 정치적으로 좌경화 흐름과 우경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정부와 지배계급은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가 탄압과 인종차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양극화는 우리 편의 거대한 저항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수개월 동안 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연금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둬 프랑스 거리로 나왔습니다.

1년 전에도 광범한 분노가 있었는데, 특히 의회에 예산안이 상정될 때마다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모든 것을 봉쇄하자”는 행동이 SNS에서 제안됐습니다. 어떤 기성 조직의 도움 없이도 이 호소가 퍼져 나가자 정부는 겁에 질려, 행동의 날이 오기도 전에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도 이런 좌경화의 표현입니다.

4주 전 파리 교외의 한 학교에서 시작된 항의 행동이 아주 빠르게 확산돼 천여 곳의 학교가 참여하는 전국적 운동이 됐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봉쇄와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학으로도 행동이 번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의 운동에 가세하며 대학의 90퍼센트가 봉쇄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보름 동안의 방학이 시작됐지만, 대학은 방학이 아니어서 대학생들의 대학을 점거 봉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Joan BELLEC

전략적 쟁점 1: 파시즘에 맞선 투쟁

대중 운동은 전략적 문제들을 제기할 뿐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도 줍니다.

그 첫 번째로, 파시즘과 파시즘에 맞선 투쟁이라는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운동 안에서도 논쟁이 되는 문제인데요.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대중 운동이 있다고 해서 파시스트들의 세가 제풀에 약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이 몇 주 동안 이어지고, 청년들, 중고등학생들까지 반(反)파시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도 여론 조사에서 국민연합 후보 마린 르펜의 지지율은 여전합니다.

10월 17일 집회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국민연합과 마린 르펜은 이 운동을 저지할 유일한 세력이자 “질서의 정당”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좋은 점도 있는데, 바로 파시즘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파시즘의 본질은 운동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저항과 노동계급의 조직들을 분쇄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운동에 과제를 제기합니다. 운동의 힘으로 파시스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파시스트들이 우리를 물리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파시즘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를 두고 프랑스뿐 아니라 곳곳에서, 그러나

특히 프랑스 좌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입장은 역사적으로 민중전선 전략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온건해지자. 급진적 요구는 내세우지 말고, 온건한 자본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파시스트들의 전진을 막자.’ 프랑스 좌파의 다수 경향이 오랫동안 따라 온 노선입니다.

그 결과 현재 파시스트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는 다른 — 그러나 실천에서는 같은 —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이 벌어지는 시기에, 지금 프랑스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데, 뭐 하러 파시스트들에 신경 써야 하니까? 혁명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틀 뒤인 10월 24일 토요일, 파리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도시 오를레앙에서 국민연합의 당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이번 토요일 그 당대회에 맞서는 대규모 시위가 필요하다고 노조 지도부 및 다수 좌파를 강하게 압박하고 논쟁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우리 주장에 호응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들도 말로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주요 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은 오를레앙 시위를 다른 단체들과 공동 조직하기를 거부했지

만, 10월 24일 파리에서 오를레앙으로 가는 버스 한 대는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작 한 대요! CGT가 동참을 거부했기에, 우리 연대체[드니가 조직자로 있는 ‘연대의 행진’을 가리키는 듯하다 — 역자는 별도로 파리에서 오를레앙으로 가는 버스 열두대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 토요일에 이어 10월 24일 토요일에도 파리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리게 되자, CGT 지도부는 그것을 핑계로 버스 대절을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조차 이번 토요일에 소도시 오를레앙에서 적어도 1만 5,000명이 반파시즘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합은 우리의 운동과 거리의 저항, 좌파를 막을 유일한 세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회에서 마린 르펜은 이번 주말 자신들의 당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리가 우리의 것이고, 대중 운동의 전통도 우리의 것이며, 다수가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국민연합은 자신들을 직접 겨냥한 이 시위에 직면해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파시즘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놓고 운동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사진 출처: Jeanne Menjoulet (블라키)



사진 제공: Guy Smallman

이것이 양극화의 한 측면이자, 현재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입니다.

극우의 성장

하지만 양극화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극우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양극화는 국민연합(RN)이라는 진정한 파시스트 정당을 키우고 있습니다.

몇 달 뒤 프랑스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열립니다. 국민연합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이 여론 조사에서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모든 여론 조사에서 르펜은 1차 투표에서든 결선 투표에서든, 좌우파 막론하고 다른 모든 후보를 크게 앞질러 당선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 그림입니다. 거리에서는 운동과 민중 항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파시즘의 위험도 있습니다.

전략적 쟁점 2: 노동계급의 동참

운동의 두 번째 전략적 쟁점은 노동계급 문제입니다.

민중 항쟁은 훌륭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혁명은 어느 시점에서는 국가를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민중 항쟁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급의 힘을 가늠하고 조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파업과 작업장 점거를 통해 우리 계급의 권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투쟁은 훌륭합니다. 학생들의 호소에 응해 노동자들이 학생들을 대거 지지합니다. 하지

만 주로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지하려 시위에 나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부모로서 지지하는 것은 우리 계급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운동 안에서 파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운동이 벌어지는 동안 중고등학생들은 학교를 봉쇄했고, 대학생들은 대학을 봉쇄했고 지금은 점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지지하려 매

주 시위에 나왔지만, 파업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과 노동자들, 노조 활동가들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폴란드 출신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 파업이라고 부른 과정의 멋진 면모가 드러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운동 초기에 노조의 파업일을 활용해 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노조는 9월 29일 공공·서비스 부문 파업을 하기

로 이미 여름에 정해 둔 상태였습니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다. 그 파업은 아주 관료적인 방식의 하루 파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중고등학생들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이날을 잘 활용해 전국적 학교 봉쇄와 시위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중고등학생 투쟁의 분출과 확산이 노조의 파업일과 맞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생들의 투쟁이 학교 천여 곳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노조 활동가들, 파업 노동자들과 중고등학생 운동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노조 관료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압력으로 통제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압력을 받고 있었기에 뭐라도 호소하기는 해야 했던 노조 지도부는 다음 전국 파업일을 11월 5일로 잡았습니다. 11월 5일은 9월 28일에서 무려 5주 뒤였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의 압력 때문에 노조 지도부는 10월 6일과 13일의



연대를 꺼리는 노조계 지도부들을 뛰어넘으려면 혁명가들이 직접 노동자들과 관계 맺고 파업을 선포해야 한다

시위와 봉쇄도 지지해야 했습니다.

10월 17일 행동도 원래 중고등학생 투쟁이 시작되기 전인 9월 초에 SNS를 통해 계획된 것이었고, 당시에는 거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중고등학생들은 이 날짜를 아주 잘 활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거리로 나와 거리를 점거합시다.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노동자도, 모두 함께 정부의 긴축과 파시즘에 맞서 나섭시다.”

전략적 쟁점 3: 혁명적 조직의 필요성

마지막 세 번째 전략적 문제인 혁명적 조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시즘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노동계급과 학생들의 운동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두 문제가 앞으로 프랑스에서 핵심적일 것이라는 제 얘기가 여러분께 설득력 있게 들렸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계 어디서나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문제에 관해 이론적 토론과 논쟁을 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론적 문제처럼 보이던 것들이 지금 프랑스에서는 운동 내의 구체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 주장을 현실과 경험, 능동적인 실천과 결합해서 명료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혁명가로서 우리는 파시스트에 맞선 특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결합합니다. 물론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설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를레앙의 반파시스트 행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우리는 노동자들과 관계 맺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학교 주변, 대학 주변의 병원과 우체국 등을 찾아가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파업에 나서도록 복돋자는 것이죠. 제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파리의 저희 동지들은 10월 17일 파리 북부에서 팻말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17일 토요일 늦은 아침에 200명이 모였습니다. 지역 노동자들과 노조 활동가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도심으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와 학생 300명이 ‘비공인 시위’라고 불리는 불법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리 북부에서 출발해 거리와 골목을 누비다 도심을 점거했습니다. 도심에 도착했을 때 그 대열은 3,000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17일 토요일 시위에서는 많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사례는 지역의 단결과 조직적 기반, 일반 조합원 기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시위에 집단적 힘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 3,000명을 모아 낸 핵심 300명은 이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11월 5일 파업을 함께 조직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주장과 전략, 그리고 혁명적 조직을 통해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전망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 ‘계급 독립성’(A2C)은 작은 조직입니다. 우리 주장에 호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만큼, 조직을 더 크게 미리 건설해 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조직을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조직을 건설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격월간지를 냈고 한 호당 200부 정도 판매했습니다. 이번 투쟁이 시작되기 전인 9월 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월간지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뒤인 10월 24일 토요일 오를레앙의 반파시스트 시위에서 우리는 300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두 달 동안 팔던 분량을 하루만에 팔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엄청난 규모의 투쟁이 벌어지

이번에도 노조 지도부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17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서야 그날 시위에 나오라고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이틀 앞두고서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모든 노조가 파업일로 잡은 11월 5일이 투쟁의 역동성과 연결되면서 실질적 중요성을 띠게 됐습니다.

노조 지도부가 운동의 기세를 다른 데로 돌리고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잡은 11월 5일 파업이, 이제는 운동을 확산시키고 노동계급의 행동을 중고등학생·대학생들과 연결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터와 중고등학생 운동 안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동과 파업을 조직하자. 수동적 파업이나 시위 참가에 그치지 말고, 모든 지역과 일터에서 사람들을 조직하자. 일터를 점거할 전방을 가지고 조직하자.”

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일이 형태를 달리해서 어디서나 벌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최대한 빨리 혁명적 조직을 건설하십시오.

지금 상황과 이 모든 논쟁에는 혁명가들이 필요합니다. 운동 안에서 주장을 펴고, 혁명적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혁명에서 많은 것을 배우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문제는 우리가 혁명에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운동으로부터 배우려면 이런 모임과 토론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이 운동에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파시스트를 물리치고 혁명으로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번역 이원웅

웹사이트에서 청중 발언·질문과 고다르의 토론 정리를 함께 읽으시오.



자본주의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나타내는 세계 곳곳의 투쟁들

이원웅

프랑스 투쟁은 유럽과 유럽 바깥의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항쟁들의 하나다. 하나같이 전쟁과 침체, 긴축 재정과 물가 폭등에 따른 주거난과 생계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중도 정부들에 대한 환멸, 극우의 발호에 대한 반대, 팔레스타인 연대 정서도 공통점이다. 이는 현 상황이 어느 특정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전반의 위기임을 반영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외의 각국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0월 30일 17개국 100곳 이상의 항구에서 벌어질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항만 노동자 행동의 선두 주자다. 이탈리아에서는 10월 30일 행동 계획과 맞물려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층노동조합(USB)의 제안에 의해 10월 30일 파업은 항만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기층 노조들의 전국 파업으로 확대됐다.

극우 멜로니 정부는 전쟁과 생계비 위기에 맞선 10월 16~17일의 격렬한 시위에 대응해 탄압을 더한층 강화했다.

긴급 법령을 발표해 시위대와 시위 참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심의 광장에 군대를 추가 배치했다.

그럼에도 10월 24일 토요일 이탈리아 곳곳의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 광장을 되찾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굼뜨게 움직이던 이탈리아 최대 노총인 이탈리아 노총(CGIL)이 11월 20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한 달이나 뒤지만, 투사들은 이 파업 계획을 투쟁을 확대할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0월 17일 로마의 시위대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프랑스 투쟁이 주는 영감에 힘입어 10월 21일 공공부문 하루 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애초 노조 지도부는 소극적으로 움직이며 11월 말로 멀찌감치 파업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교사들과 병원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파업을 추진하고, 여러 대학들에서 총회와 교육 부문 전체의 시위 참가 결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등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거세

지면서 노조 지도부는 10월 21일에 하루 파업을 선포한 것이다. 일터와 캠퍼스에 뿌리 내린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소생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반파시즘 투쟁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11월 25일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주택난이 촉발한 항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첨예해지는 가운데 우파인 국민당은 파시스트들이 포함된 극우 정당 복스와 동맹을 꾸리고 있다.

파시스트들은 마드리드의 광장 점거 농성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 몇 배 규모로 반파시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마드리드 도심은 모든 투쟁이 연결되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번 투쟁은 2011년 광장 점거 투쟁보다 더 진전해 있다. 시위대는 정치 쇄신이 아닌 총파업을 구호로 내걸었고, 스페인의 양대 노총이 14년 만에 11월 11일

총파업을 선언하게 했다. 자주적 조직화의 중심에는 일터에서 투쟁을 벌이며 모두의 본보기가 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 선두에는 2주째 무기한 파업 중인 마드리드 교사들이 있다. 다른 일터에서도 이를 본보기 삼아 투쟁에 나섬으로써 11월 11일 총파업을 건설하는 과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사회당 산체스 정부는 운동의 분출을 생존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산체스 정부는 포데모스를 제외한 의회 내 중도 좌파들과 '광범 전선'을 결성해 투표만이 극우를 막을 유일한 희망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운동은 선거로 전망을 좁혀서는 안 된다.

알바니아

알바니아에서는 5월 환경 파괴와 부패에 반대해 시작된 투쟁(플라밍고 혁명)이 대규모 반정부 투쟁으로 발전했다.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 열악한 교육여건, 실업에 대한 불만이 결합되면서 총리 에디 라마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라마가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도입했음에도 시위는 계속 커지고 있다. 10월 25일 시위대는 라마가 집무실 앞에 대화를 청한다며 설치해 놓은 의자를 불태워 버리고, 시위진압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러 관공서와 은행 건물이 불탔다.

튀니지

2011년 아랍 혁명의 시발점이었던 튀니지에서도 투쟁이 커지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10월 17일 노동총동맹(UGTT)의 주도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21년 사이에드의 쿠데타로 권위주의적 통치가 본격화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한 달 전 사이에드 정권은 글로벌 수무드 구호 선단의 구금자들과 연대하는 시위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럼에도 생계비 위기에 항의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포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10월 22일 수도 튀니스의 교외 지역에서는 경찰의 잔혹한 처사 때문에 생긴 죽음에 항의해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서를 공격했다.

같은 날 튀니지 남부 스팅스 시에서도 한 대학생의 심장 마비 사망을 둘러싼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 시위는 구급대가 굼뜨게 움직인 것에 대한 항의로 시작돼, 튀니지 전반의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항의로 확대됐다.

생계비 위기 등으로 분노가 누적된 가운데 어디서든 투쟁이 불붙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도 주택 위기가 촉발한 항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파 정부의 임대차법 개악에 반대하며 포르투에서 시작된 시위가 10월 15일 이래 포르투갈 전역의 도시로 번졌다.

경찰은 리스본·포르투의 광장 점거 농

성장을 거듭 공격했고 10월 25일 결국 농성장을 침탈했다. 그러나 탄압은 더 광범한 분노를 자아냈다. 운동도 동력을 잃지 않았다. 거리에서는 11월 11일 스페인 총파업에 발맞춰 포르투갈에서도 총파업을 벌이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르펜이 폭동에 웃는다?

르펜에 레드카펫을 깔아 준 것은 중도파다

김인식

매스미디어가 프랑스 투쟁을 다루며 지루하게 반복하는 헛소리가 있다. 프랑스 대중의 거대한 분노 표출이 마린 르펜과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의 입지를 크게 강화해 줬다는 것이다. 르펜에게 대선 승리를 안겨 주지 않으려면 파시즘에 맞서 중도파를 지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합이 성장할 공간을 열어 준 것은 좌파 정치인 장클로드 멜랑송, 체제에 맞서 싸우는 학생·청년·노동자가 아니다. 바로 중도파 정치인들이다. 중도좌파든 중도우파든 중도세력은 르펜의 입지를 약화시키겠다며 인종차별적 연사를 내뿜고 이민 억제·억압 정책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국민연합은 정당성을 획득했다.

또, 역대 프랑스 중도 정부들은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깎아 줬다. 대규모 부자 감세로 재정 적자가 유럽연합의 3퍼센트 한도(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퍼센트 이내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를 넘어섰다. 그러자 마크롱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의 살림살이가 쪼들렸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이런 조건은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적잖은 중도파 인사들은 내년 대선 결선에서 멜랑송과 르펜이 대결하면 차라리 후자에 투표할 수도 있다.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억압할 르펜의 의지를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당과 공공광장을 아우르는 중도좌파 후보 라파엘 글릭스만의 핵심 공약은 멜랑송과 그의 불복종프랑스에 대한 적대감과 연대 거부다.



‘파시스트가 되느니 돼지가 낫겠다’ 파리의 시위대

최근 폭동을 비롯해 대규모 저항 속에서 파시즘의 위협이 증대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학생들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동적인 국가 탄압 탓이다.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앙 르코르뉴는 범정부 위기 대응 회의에 국민연합을 초청해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작태 덕분에 국민연합은 ‘혼란에 맞선 방파제’이자 ‘민주적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합 대표 조르당 바르텔라는 경찰 탄압을 열렬히 옹호했고 정부의 섹팜 수류탄 사용 금지 결정에 격분했다.

국민연합이 포퓰리즘 수사를 거두고 대중 운동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노란 조끼 운동과 2023년 연금 개혁 반대 운동 때 국민연합은 시위대의 변호자로 비치려 애썼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다. 사회적 갈등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은 반기득권 세력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졌다.

국민연합에 고무된 파시스트 집단들이 곳곳에서 국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10월 17일 대규모 시위 직후 리옹에서는 파시스트 100여 명이 야간 통행금지를 무시한 채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행진했다. 또, 루앙, 니스, 리옹 등에서는 시위대를 폭행하다가 항의를 받으며 쫓겨났다. 따라서 저항은 계속돼야 할 뿐 아니라 더 커지고 더 심화돼야 한다.

국가 탄압

그러나 프랑스 지배계급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배계급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잔혹한 국가 탄압이다. 르코르뉴는 10월 21일 7개 노동조합 총연맹 지도자들과 만났다. 그러나 학생 대표자들은 부르지 않았다. 노조 지도자들은 이 면담을 거부하지 않고 총리를 만났다. 하지만 르코르뉴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

다. 법질서 유지를 당부했을 뿐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부에 의해 무시당했다.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기성 정치인들과 거리 운동의 분노 사이에서 타협과 협상을 하는 노조 지도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면담 직후 소피 비네 노동조합총연맹(CGT) 사무총장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11월 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현 국면에서 마크롱 정부의 중심 대응은 실질적 양보나 타협을 통해 운동을 달래고 더 전투적인 경향을 분산시키는 것에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마크롱은 유약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탄압을 지속한다. 극좌파와 거리 운동에 굴복했다고 르펜이 떠들 빚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금융시장이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5퍼센트를 넘었다. 독일 국채 금리보다 1.5퍼센트포인트 더 높다. 금융시장은 마크롱 정부의 취약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운동을 통제하거나 진압하지 못해 이윤 창출에 필요한 안정을 이뤄내지 못하면 무참히 난도질할 것이다.

마크롱 정부가 국가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연합을 고무할 뿐이다. 만약 내년 봄 대선에서 르펜이 이기면 그에 맞선 파업, 시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르펜은 마크롱이 현재 사용하는 잔혹한 진압 방식을 더 크게 동원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들이 했던 일이다.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파시즘의 정상화

프랑스 자본가 계급은 마크롱 정부가 노동자와 학생들의 저항을 결정적으로 분쇄하지 못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일부 프랑스 자본가들은 이윤 회복을 위해 철권을 원한다. 파시스트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극우의 정상화, 이것이 프랑스 지배계급 일부의 또 다른 대응 전략이다.

인종차별과 극우를 비판해 온 좌파 성향의 프랑스 매체인 <미디어파르>에는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비관과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을 전하는 마르틴 오랑주의 글이 실렸다.

“재계에 충격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 그들은 국가와 권력의 붕괴를 보고 있다고 느꼈다. 예외 없이 정부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규탄했다. … 우리는 더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니다. 체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계의 이런 분위기는 1930년대 초 독일 자본가들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도박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파시스트들의 거친 손에 권력을 쥐여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군화, 총, 감옥만이

질서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찰리 김버의 페이스북에서 재인용)

프랑스 자본가들은 마린 르펜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는 르펜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치 1930년대 초 독일에서

▶ 13면으로 이어짐

난민 대학생이 서강대 난민 전형 논란에 대해 말한다

“난민 전형은 한국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아닙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고, 현재 서울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중도 입국을 했는데, 한국에서 대학 입학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한국에 중도 입국을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이 어떤지, 학생들이 어떤 교육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닥쳐오는 압박이 아주 심합니다.

한국어를 완전히 기초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아무리 잘 쓰더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용어나 수행평가, 시험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려면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적인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 내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 생활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한국 교육의 언어 장벽을 해결해 나갔다면, 대학교에 입학해서 닥쳐오는 것이 바로 등록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이 한국 학생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하면 수업을 못 따라가게 되고,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장학금이 없으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한국 난민 인권 단체들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절실한 필요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사회보장을 법적으로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강대 난민 전형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고 입학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런 주장에 반대합니다. 처음 얼핏 들으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어떻게 뽑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냉대로 고통받는 난민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

난민 전형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정원 외 전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퍼센트대에 불과합니다.

그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통해 입학을 허용하고, 불과 두 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형이 일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역차별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고, 법적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장학금이 없으면 난민 학생들은 교육을 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정리 김광일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

▶ 12면에서 이어짐

언론 재벌 후계베르크, 철강 산업가 티센, 전직 국립은행 총재 샤흐트 등 일부 자본가들이 나치에 자금을 대고 동조했던 것처럼 말이다.

국민연합 대표 조르당 바르텔라는 사용자 단체인 메데프(Medef)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한다. 르펜은 매년 1,360억 유로 규모의 공공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말해 최고경영자들의 환심을 샀다. 비단 프랑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영국 엘리트들의 신문 〈이코노미스트〉(10월 16일 자)는 알리스 바이델과의 인터뷰를 대문짝만하

게 실었다. 바이델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대표다.

요컨대, 프랑스 엘리트들은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분쇄하기 위해 더한층 우경화될 태세가 돼 있다.

그리하여 르펜은 20년 전과는 판이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적잖은 유권자들이 ‘그래, 르펜이 안 될 건 뭐야’ 하고 말한다. 파시즘이 정상화되고 있다.

반파시즘 투쟁의 중요성

중도파와 사용자들은 파시즘의 부상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당성만 더해 줬다. 따라서 르펜과 국민연합의

부상을 막을 해법은 이들을 어엿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 준 중도파를 지지하거나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최소한의 요구를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들 모두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는 파시스트들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10월 24일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집결 하나는 오를레앙에서 열린 국민연합 당대회에 맞선 시위였다. 3만여 명이 참가했다. 파시스트 집회에 정면으로 맞선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총연맹 파리 지부는 오를레앙 반파시즘 시위에 애초 참

가하기로 했다가 최종 철회했다(관련 기사 8~10면). 대신에 파리에서 경찰과 약탈자들에 대응하는 질서유지대를 두기로 했다.

이런 결정의 근저에는 헌법 질서와 투표로 파시스트를 격퇴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파시스트가 거리에서도 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그러려면 파시스트들에 맞불로 맞서야 한다. 파시스트들이 행진하거나 학생들의 봉쇄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으면 그 지지자들의 사기를 꺾고 반파시스트 진영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이는 국민연합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해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주 52시간 무력화·기간제 4년·파견 확대 …

초광역특구법은 노동 개악 종합세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 개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0일 민주당 의원 박상혁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발의했다. 여기에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150개가 넘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역대 정부들이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던 각종 노동 개악이 망라된 것이 심각한 문제다. 고소득 연구·개발·전문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 적용과 휴게, 휴일, 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제외한다.(화이트칼라 이그젼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6개월로 늘린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16주 연속 주 80시간이라는 치명적인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 또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 대상 확대·기간 연장도 허용한다.

윤석열도 시도하지 못했던 노동 개악 종합 선물세트를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명분으로 기업주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여당은 노동 개악이 포함되지 않은 초광

역특구법안도(민주당 최기상의 법안) 발의됐으며, 열어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기상의 법안도 실상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대책을 망라했다.

게다가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상혁의 법안뿐 아니라 최기상의 법안에도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이 원할 경우 특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효력을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완화해 노동 개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이를 활용하면 특별연장근로 방식의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그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요구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애초 최기상의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제 확대 혜택을 주는 노동 개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안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에게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속도전”

이재명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전국 권역

에 초광역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고 논의됐다. 이를 위해 초광역특구법 입법과 함께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주 52시간 예외를 법안이 아니라 “기존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법 개정을 우회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봐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주들과 우파들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든, 시행령을 활용하든 정부가 주 52시간 후퇴라는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주 52시간 후퇴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파견법 개악 등도 저지해야 할 중요한 쟁점들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숙의”를 거치겠다고 했었다.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도 참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천을 보면 시한과 방향을 정해 놓고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숙의” 운운이 기만이자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술책일 뿐임을 보여 준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뒤통수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민주노총·한국노총 지도부

가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고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여당이 약속을 어기고 노동 개악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가한다면 노동 개악에 들러리 서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협상을 주된 업무로 하는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와 주고받기 타협을 구상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메가특구 노동 개악은 일부 양보하더라도 정년 연장은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대화와 교섭을 우선하며 양보할 것부터 생각하는 태도는 끊임없는 양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세력관계에서는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자 임금을 공격하고 추후 연금 개악 등을 더욱 강요할 공산이 클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경쟁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우선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려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면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투쟁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의 개혁 배신에 맞서 기층 노동자의 커져 가는 불만을 투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정선영

미국 AI 거품이 터지는가?

이정구 마르크스주의 독립 연구자

미국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불소수지로 코팅한 테프론 프라이팬에 비유되곤 했다. 미국-이란 전쟁에도 5퍼센트를 넘나드는 고금리에도 달라붙지 않고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월 들어 반도체 및 AI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10월 초 대비 주가가 40퍼센트나 하락한 네오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가 포문을 열었다. 코어위브는 데이터센터 및 GPU 인프라를 구축해 하이퍼스케일러들(주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 설비를 임대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코어위브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액면 금리는 9퍼센트 안팎이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코어위브의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15퍼센트에 이르기도 했다. 코어위브의 부채가 많아 회사채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코어위브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을 뿐 아니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조차 코어위브의 자금 조달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코어위브보다 12배나 큰 오라클의 회사채도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정크본드를 간신히 모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라클과 긴밀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의 큰손 손정의의 소프트뱅크 주가가 올해 6월 이래 지금까지 반토막이 났다.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들의 정크본드(투기 등급 채권) 발행액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지난해 정크본드 발행액이 86억 달러였지만 올해 10월 중순에는 370억 달러로 4배 늘었다.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은 지금 데이터센터 건설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할 자본가들이 이윤 문제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이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메타가 잘 보여 줬다. 메타의 3분기 매출은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6퍼센트나 하락했다. 메타의 경우, 3분기에 벌어들인 현금보다 설비 투자 지출이 21억 달러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부분 하이퍼스케일



AI 투자가 가져올 이윤을 둘러싼 자본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가가 폭락한 코어위브의 데이터센터

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AI 투자에 자기 돈을 쏟아붓는 것으로도 부족해 이제는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AI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 것이라는 상황은 예견됐다. 그래서 지난 8월 젠슨 황은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고성능 GPU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커진 판돈

그런데 이 계획이 지닌 부채 증가나 순환 거래의 문제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골드만삭스, 블랙록, 블랙스톤 등 거대 금융기관과 사모펀드들이 자금 조달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이제 판돈이 더 커진 셈이다.

지금까지 금융가의 큰손들은 AI 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배제되지 않으려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사실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축이 AI 산업이기에 다른 곳에서 수익을 거둘 기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10월 들어 AI 산업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수익성이 도마에 올랐다.

그렇다고 단시일 내에 버블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젠슨 황의 5,000억 달러 기금에서 알 수 있듯 한두 기업이 흔들려도 다른 기업들이 자금을 수혈해 문제를 막아 줄 수 있다. AI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면 국가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

를 모면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2025년 8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401(k)를 사모펀드, 사모대출, 벤처캐피탈, 부동산, 가상자산 등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블랙록이나 블랙스톤 같은 사모금융 운용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 401(k) 자금이 기업 구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사모금융 시장의 불안은 올해 초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 사태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바 있다.

AI 산업이 제국주의적 경쟁(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 모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며,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정책으로 천문학적 자금 지원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오늘날 AI 투자를 닷컴 버블 때와 견주는 시각이 많지만, GDP 대비 AI 투자 비중은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했을 때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1990년대 후반 미국 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자본 투자는 미국 GDP의 4퍼센트 수준이었지만 현재 AI 관련 인프라 투자는 GDP 대비 2퍼센트 수준이다. 테크산업 투자 지출을 광의로 잡더라도 닷컴 버블 때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은 “우리가 거품 속에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AI 찬양론자들이 말하는 생산성 향상은 더딘 반면 각종 난관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은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더 어렵

게 만들 것이며, 40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탓에 정부의 재정 지원도 쉽지 않은 전망이다. 판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인 2007년 7월 씨티그룹의 CEO 척 프린스도 거품이 일고 있음을 알지만 경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유동성의 관점에서 음악이 멈추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다. 하지만 음악이 울리는 동안은 춤을춰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다.”

AI 거품도 마찬가지로 국면에 놓여 있다. 어두운 그림자는 커지고 있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미국의 이란 전쟁 3라운드 가 오고 있다
- ★ 신간 소개 《한국군 해외파병사》 (김어진 지음)
- ★ 세계로 번지는 청년 반란
청년들은 왜 들고일어났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 ★ 대구 코웨이 여성 노동자들
“정당한 항의에 폭행 누명 씌워
해고한 사용자에게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 배경 설명 브라질 대선을 계기로
보는 룰라와 노동자당의 역사
- ★ 늘어난 세수, 대체 어디로 흐르길래
소방 예산 삭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 무시
- ★ 심층 서평 트로츠키의 노동조합론,
오늘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이주민 지원 예산 삭감 말라

김광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위촉 노무사

분노스럽다. 긴급 재정을 추진하며 ‘소방 재정 빨대’ 운운했던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를 포함하는 첫 조직 개편안을 입법에 고했다.

2024년 말 기준 재한 이주민 수는 약 260만 명에 달하고, 경기도는 이주민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거주자가 8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더 늘었을 것이다.

2024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경기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된 이유는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배경은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였다. 참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참사 이후 경기도는 부랴부랴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이주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사후 약방문 격이고 충분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민사회국 신설은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의 대가이며 아주 작게나마 개선의 여지를 연 것이었다.

그런데 추미애는 대법원이 아리셀 대표 박순관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10월 20일 이민사회국 폐지를 발표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인 셈이다.

두 번 죽이다

내가 위촉 노무사로 있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민사회국 신설과 더불어 이주민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10여 개 언어 통역 상담사들이 이주민들의 일상적 고충을 상담하고, 무료 법률 상담과 노동 분쟁 권리 구제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자신의 처지를 한국어로 원활하게 표현하고 상담할 수 없는 이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기관이다. 나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유학생 등 지



이주민을 ‘재정 빨대’ 취급하는 추미애의 인종차별 규탄한다

원이 절실한 노동 사건을 지원했다.

그런데 추미애는 이민사회국 폐지 발표와 더불어 이 센터의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심산이다. 경기도 내 다른 이주민 지원 센터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예산 지원이 삭감돼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2023년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그해 윤석열은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운영하던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국의 지원 센터들을 폐쇄한 바 있다.

2023년 윤석열을 보는 듯한 기시감

사실 경기도지사 추미애의 이런 행보는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월 23일 경기도 청 앞에서 열린 추미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지방정부에 회피하고 전가시키고, 지방정부 역시 무책임으로 방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나주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이 폭로된 직후 이재명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에 철저히 대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그해 10월 경주 APEC 회의를 앞두고 벌인 미등록 체류·취업 집중 단속으로 베트남인 유학생 투안 씨가 사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주민 라이더를 집중 단속해 734명을 단속했고, 68명을 추방했다. 이것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일인가?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족쇄인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조차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은 올해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에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을 뺀 존재라고 직접 비난한 바 있다.

극우 추동

이재명은 극우의 주장을 정부 수준에서 현실화하기도 했다. 한국의 극우들은 이주민(특히 중국 국적자)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공격한다. 그 대상은 주로 중국 동포인데 이는 순전히 데마고기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극우의 주장을 수용해 이주민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활용을 제약하도록 했다. 게다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당 제약을 소급 적용

하라고 주문했다. 대상자들은 규정에 어긋난 바가 없다며 담당 장관(정은경)이 난색을 표하는데도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런 걸 보면, 갈등 중인 이재명과 추미애는 이주민 권리를 후퇴시키는 데서는 이견 없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이런 행보들은 그 자체로 이주민의 삶을 옥죄는 것인 동시에, 부상하고 있는 한국 극우에 힘을 보태는 것이기도 하다. 극우가 사용하는 무기의 하나가 이주민 배척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극우들은 프랑스 저항을 빌미로 이주민 배척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정 위기의 책임은 이주민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 초과 세수도 생긴 상황 아닌가. 문제는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다.

추미애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과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은 저들의 우선순위에서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이 한참 뒷전임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긴급 재정은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모두에게 해악적임을 알 수 있다.

추미애는 ‘재정 비상’을 빌미로 한 이민사회국 폐지 시도와 이주민 지원 예산 삭감을 당장 중단하라.